

시민안전실

I. 총 괄

II.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III. 주요 당면·현안사항

I. 총괄

□ 시민안전실에서는

- 원자력안전 대책 등 종합·실천적 안전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
- 민·관협력의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훈련·교육실시 및 행동매뉴얼 운용으로 재난시 신속하게 대처
- 민·관·군·경 협력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유해사범 단속과 범죄 취약계층 보호 등 안심사회 구현

□ 상반기 주요성과

- 원자력안전 강화 등 시민체감형 안전정책 추진
 - －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운영,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, 원자력안전 협약
 - － 지역안전관리계획(97개 유형)수립 추진,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
-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자연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
 - － 종사자 역량교육, 상시훈련(8회),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(28종)
 - － 폭염, 풍수해 등 여름철 재해대책 마련, 국가안전대진단 실시
- 비상대비 위기관리능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
 - － 충무훈련(6월), 통합방위C4I시스템 구축 완료, 민방위 운영 강화
- 범죄예방 및 민생유해사범 계도·단속으로 민생안정 도모
 - － CCTV설치 지원(257대), 민생사범 단속(검찰송치 44건 행정처분 46건)

□ 하반기 계획

-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및 시민주도의 안전문화 확산 중점
 - －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, 취약 시설물 체계적 관리, 안전신고 활성화
- 민·관협력의 재난대처 능력향상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
 - －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, 안전한국 훈련, 읍지연습 등 내실있게 추진

II.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1. 시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
2.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3. 체계적인 재난대비 태세 구축
4.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위기관리능력 강화
5. 범죄예방 및 특사경 수사활동 전개

1. 시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

- 원자력 관련 각종 의혹 검증으로 시민의 안전확보와 불안해소
 - 항구적인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

①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

-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구성 / 27명(주민, 시민단체, 전문가 등)
- 검증분야 선정 / 6개 분야(1차 3개 분야 우선 검증), 3개 검증팀 구성
- 검증단 운영 / 전체회의 5회, 실무회의 3회, 분야회의 6회

향후 계획

- 시민검증단 활동 적극 지원 / 분야별 회의 중심, 주 1회
- 시민검증단 중간 보고회 / 7월중
- 2차 3개 분야 검증 / 안전관리시스템, 방재시스템, 원자력안전 관련 제도

② 원자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

-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(4.28) / 원자력 안전대책 등 6개 조문
- 시+유성구+연구원 원자력 안전 협약(5.22) / 안전대책 사전협의를 등 15개 조문
- 시민 비상대피로 확보 정책토론회(4.27) / 80명(주민, 시민단체, 공무원 등)
- 안전대책 강구 법제화 및 주변지역 지원 법령 제·개정 건의 / 6회

향후 계획

- 민·관·정 협의회 대책활동 / 제도개선 토론회, 대정부·국회 대상 입법활동
- 원자력 관련기관 업무협약 /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전원자력연료(주)

③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 및 주민보호 강화

- 환경방사선 측정조사(32개 지점), 통합 방사선 관제시스템 구축운영
- 비상구역내 주민보호용 방재물품 확충 / 방사선측정기 등 35대
- 방사능사고 대비 갑상선 방호의약품 확충 / 10만정

향후 계획

-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및 방사선 비상진료분야 교육
- 주민 소산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 현행화
- 갑상선 방호의약품 추가 확충 / 1만정

2.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- 현장위주의 실행력 있는 안전정책 수립 추진으로 안전환경 조성
 - 시민 스스로 재난·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의식과 역량 제고
-

①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 추진

- 재난유형별 예방·대응을 위한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
 - －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(84개),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(13개)
- 취약시기별 시민안전종합대책 수립 / 신학기, 봄 행락철, 여름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향후
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취약시기별(가을 행락철, 겨울철)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• 지역안전관리계획 추진상황 점검(7~8월) |
|------------------|---|

② 민·관 협력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

-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
 - －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(서구 정림지역), 안심마을(4개소)
- 점검하고 실천하는 ‘안전점검의 날’ 운영 / 매월 4일
-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‘안전신문고’ 활성화 / 1인 1신고 운동, 2,786건 처리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향후
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평가(12월)•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도입·운영, 참여집중 홍보 |
|------------------|---|

③ 시민 체득형 안전문화운동 전개

-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/ 88개소
 - － 어린이집, 경로당,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
- 시민 안전의식 제고 / 현장홍보 부스 운영, 시민안전길라잡이 제작 배부
- 직장 안전문화운동 추진 / 체험교육(월1회), 안전방송(매주 수요일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향후
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제2회 Safe 대전 안전체험한마당 개최(9월)• 찾아가는 안전교실 확대 운영, 안전문화 홍보관 설치(11월) |
|------------------|--|

3. 체계적인 재난 대비 태세 구축

- 다양한 재난발생 대비 사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대응태세 확립
- 재난 취약시설 중점 관리 및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 피해 최소화

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안전망 확충

-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/ 재난정보 수집·전파, 재난초기대응
- 재난 예·경보 시설 확충·정비 기능보강 / 96개소 1,365백만원
-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지원 및 상황 조치

향후 계획

-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예·경보시설 지속 확충
-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, 재난피해자 구호 및 심리안정 사업 지원

② 재난 상시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

- 폭염, 태풍,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 안전대책 집중 추진
- 지진대비 안전대책 / 내진보강(112개소), 대피소 정비, 시민행동요령 홍보
-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 / 시특법·특정관리대상시설, 초고층건물
- 전문가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 / 국가안전대진단, 축제·행사장 점검

향후 계획

- 풍수해, 폭염, 물놀이 사고 집중홍보 및 기상특보별 비상근무체계 운영
- 겨울철 폭설 등 재난 취약 시기별, 분야별 특별 안전대책 추진

③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난 관리체계 확립

- 현장 행동절차 위주의 재난대응 매뉴얼(28종) 정비, 통합 제작
- 재난안전 민·관 협력체계 강화 / 위원회 구성, 유관기관 간담, 자료 공유
-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
 - 종사자 교육(2회), 상시훈련(8회), 재난영화제, 재난예방포스터공모전

향후 계획

-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장 적용실태 점검(11월)
- 재난종사자 교육 및 재난 유형별 상시·종합훈련 실시 역량 강화

4.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위기관리능력 강화

- 민·관·군·경 통합방위태세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안보역량 강화
 - 비상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상시 민방위태세 확립
-

1 통합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유지

- 통합방위C4I시스템 구축 등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
 - 지방통합방위회의, 대전지구전투전승기념식 등 안보 공감대 구축
 - 영상회의시스템, 통합방위정보공유체계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
- 전시 동원능력 점검을 위한 충무훈련 실시(6.19.~22)
 - 기술인력, 차량, 건설기계 동원 점검
 - 피해복구 훈련 등 실제훈련 실시,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등 상황조치 연습

향후

계획

- 지역 통합방위태세 점검 화랑훈련 실시(7.17.~7.21.)
- 안보체험 및 세미나 개최(10월), 충무계획 수립(11월)

2 생활 민방위 운영 강화

- 민방위대 편성·운영(104,128명) / 1~4년차 집합교육, 5년차 사이버교육
- 민방위 시설 관리실태 점검·정비 / 대피시설(704개소), 급수시설(202개소)
- 지역특성화 재난맞춤형 훈련,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

향후

계획

- 하반기 보충교육(8월~11월), 지진대피훈련 및 민방공대피훈련 실시
- 민방위 시설 관리실태 지속 점검 및 관리

3 시민안전 경보전달 체계 확립

- 민방공 대피훈련 경보발령(2회), 적 항공기 공격대비 가상 훈련(6회) 실시
- 경보사이렌 활용 주민 홍보방송 실시 / 산불예방, 물놀이 안전사고
- 경보 난청지역 해소 / 경보단말 신설(1개소), 다중이용건물내 경보전파(57개소)

향후

계획

- 민방위경보 가청률 일제조사, 난청지역 해소대책 수립
- 민방공 대피훈련을 통한 유사시 경보전달태세 확립

5. 범죄예방 및 특사경 수사활동 전개

- 유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로 범질서 확립과 민생안전 도모
-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보호활동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① 시민생활 유해사범 근절 분야별 기획수사

- (수사분야) 7개 분야 / 식품, 공중위생, 의약품, 환경, 원산지표시, 축산, 청소년보호
- (수사방법) 계절·시기별 선제적 기획수사, 사회적 관심분야 수사
- (수사실적) 시민생활 유해사범 단속·적발 / 검찰송치 44건, 행정처분 46건

향후 계획

- 불량식품, 원산지 거짓표시 등 시민생활 유해사범 연중 중점 수사
- 휴가철, 명절, 김장철 및 연말연시 등 주요 성수기 테마별 기획수사

② 유관기관 수사협력 및 수사역량 제고

- 대전지방검찰청,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협력체계 강화
 - 특사경 간담회(4회), 원산지 합동단속 등(3회)
-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/ 법무연수원 16명

향후 계획

- 유관기관 합동 단속수사, 타 기관(특사경 부서) 견학
- 특사경 수사실무 교육, 특사경 표창

③ 범죄예방 시민보호활동 지원

-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과 지역 치안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
 - 치안협의회 운영, 시·경찰청 간담회 개최
-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지원(257대 / 3,506백만원)
- 자치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, 안전한 시민생활 제공
 -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(265백만원), 야간합동 순찰

향후 계획

- CCTV 설치·준공 / 257대 (방법용 117, 차량번호 인식용 40, 성능개선 100)
- 자율방범대 환경개선 / 초소정비, 방법장비 및 근무복 지원 등

Ⅲ. 주요 당면·현안 사항

1. 원자력안전 확보 범시민 대책활동 전개
2. 재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실시
3. 실전적인 을지연습 추진

1. 원자력안전 확보 범시민 대책활동 전개

- 원자력시설로 부터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시민단체, 정치권 등과 함께 민·관협치의 범시민 활동 전개
-

□ 「대전 원자력안전 민·관·정 협의회」 구성

- (구 성) 21명
 - － 행정(7) : 대전광역시시장, 대전광역시의회장, 구청장 5명
 - － 정치(7) : 대전 국회의원 7명
 - － 민간(7) :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등 시민대표, 전문가 등
- (역 할) 제도개선, 대정부·국회 대상 입법활동 등 추진

□ 주요 활동과제

-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, 시민감시 제도화 / 원자력안전법 개정
- 원자력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/ 유성구 덕진동 인근 10,000㎡
- 원자력시설 위급 상황 대비, 주민 비상대피로 설치 / 22km
-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 / 지원법률 제정, 지방세법 개정

□ 앞으로 추진계획

- 「대전 원자력안전 민·관·정 협의회」 출범식 / 7월
 - － 시민, 사회단체, 정치권 등 참여 규탄 및 대전선언
- 제도개선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/ 8월
 - － 전문가 등 참여 원자력안전 문제 점검, 대전 원자력 문제 이슈화
- 대정부·국회 입법활동 전개 / 9월 이후
 - － 건의문, 대전선언문 국회 및 여야대표 전달 등

2. 재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실시

- 재난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훈련 위주에서 현장중심으로 확대, 기관장 직접 훈련지휘를 통한 실전 현장대응역량 제고
 - 지난 9.12 지진을 계기로 높아진 시민 안전의식 반영, 체험형 훈련 확대를 통한 시민 스스로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
-

□ 사업개요

- (훈련기간) '17. 10월 중 (2주간) / * '16년 1주일
- (참여기관) 市, 자치구, 공사, 재난유관기관·단체, 국민안전처 등
- (훈련방법) 통합 연계 훈련(중앙부처+시+자치구+유관기관)
- (주요내용) 비상소집 훈련, 지진 복합재난 훈련, 민방공 대피 훈련, 산불 토론 훈련, 재난안전 사진전 및 소·소·심 체험 등

□ 그동안 추진상황

- 안전한국 중점 자체훈련을 위한 재난 위험성 분석(3월)
-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(3월)

□ 앞으로 추진계획

- 안전한국훈련 시민 체험단 구성 운영 / 7월말
- 안전한국훈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 / 8월중
- 안전한국훈련 기획팀 구성·운영 / 8월중
- 훈련 홍보계획 및 구 평가계획 수립 / 9월중
- 민간전문가 훈련 컨설팅 및 참여자 전체회의 / 9~10월
- 토론·현장훈련 리허설, 훈련실시 및 시·구 훈련 평가 환류 / 10~11월

3. 실전적인 을지연습 추진

-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위기관리 및 총력전 등 실전 연습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
-

□ 사업개요

- (훈련일정) ‘17. 8. 21.(월) ~ 8. 24.(목) / 3박4일
 - － 위기관리연습(CMX) : 8. 16.(수)
 - － 군사연습 : 8. 21. ~ 8. 31.(11일)
- (참여기관) 127개 기관, 8,100명 / 행정·유관기관, 중점관리지정업체 등
- (주요내용) 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한 사건메세지 처리, 자체 사건 처리, 전시과제 토의, 실제훈련, 종합상황실 운용 등

□ 그동안 추진상황

- 연합사와 연계 시뮬레이션기법 활용 주요사태(MSEL) 준비 / 6월, 80건
 - * MSEL(Master Scenario Event List): 주요사태목록
- 을지연습 시 계획통제부 구성 및 자체 사건계획 작성 / 6월, 250건
- 을지연습 순회교육 실시(국민안전처 주관) / 7월
- 을지연습 기본계획 수립 / 7월

□ 앞으로 추진계획

- 자체 사건계획 검토 및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입력 / 250여건
-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/ 8월초, 시·자치구·유관기관 등
- 국지도발 대응연습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/ 8월초
- 을지연습 근무자 편성 및 연습장 설치 / 7월말~8월초, 1일 350여명 참가
- 을지연습 실제훈련, 주요현안토의과제 선정 등 / 7월말